우암학원 창학 71주년
WCC 세계적인 전문대학 선정!!
전남과학대학교
CHUNNAM TECHNO UNIVERSITY

光州日報
70 SINCE 1952

RADIANT XROSSOVER NEW GENERATION
RX
발견하라, 감동하라
www.hyosunglexus.com
LEXUS
광주전시장 080-384-7733
전주전시장 080-263-7743

1952년 4월 20일 창간 제21780호 1판 대표전화 (062)222-8111 kwangju.co.kr 음력 5월 19일 2022년 6월 17일 금요일

나눠먹기 특별법으론 지방소멸 위기 못 막는다

10년간 매년 기금 1조원 공모
107개 지자체 나눠주는 꼴
소멸위기지역, 예비타당성 면제
국책사업 우선 배정·매칭 비율 하향
정부 재정 분배 방식 혁신 시급

지방소멸위기지역지원특별법(이하 지방소멸특별법)이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했으나 비수도권, 특히 호남의 소멸 위기를 막아내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수도권으로부터 가장 멀고, 인구·경제 규모를 갖추지 못한데다 기반시설마저 열악한 실정에서 특별법의 내용만으로는 호남의 지방 소멸 추세를 막아내기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정부 재정을 인구감소지역에 집중하는 근본적인 혁신을 통해 수도권으로 이주하려는 학생과 청년 등을 위한 기반·편의·문화·의료·교육시설 등을 집약시켜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를 위해서는 소멸위기 지역의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한 정부 예비타당성 면제, 정부 신규 국책사업 우선 배정, 지방비 매칭 비율 하향 조정 등 3대 과제를 특별법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5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방소멸특별법은 국가 및 지자체 기본계획 수립, 지자체 위원회 설치 운영,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행·재정적 특례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행·재정적 특례 지원은 보육, 교육, 의료, 주거·교통, 문화 등 5개 분야와 관련 기존 사업의 편의 제공만을 담고 있다. 또 특별법과 함께 정부는 2021년 7월 인구 소멸에 처한 지방, 낙후된 지역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10년간 매년 1조원(2022년에만 7500억원)을 조성하기로 했으며 인구감소·관심 지역 107곳에 지원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 같은 한시적이며 소규모 재정 지원으로는 수도권으로의 극심한 집중, 심해지는 지역 간 격차를 막을 수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특별법 역시 재정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지 못해 인구·경제 규모를 갖춘 지역에 정부 재정이 더 투입되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높다. 이보다는 경제성을 기반으로 한 정부재정 분배 방식의 혁신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의 재정적인 압박을 해소시켜줘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들 지자체가 정부의 기존 평가 방식에서 벗어나 교통 물류의 개선을 위한 기반시설,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시설, 경제 기반을 갖출 수 있는 기업 유치 지원 등을 통해 발전의 토대를 닦을 수 있게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인구감소지역 지자체가 추진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한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또는 기준 변경, 정부 공모사업 우선 배정, 지방비 매칭 비율 하향 조정 등 3대 과제가 선결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성이 높은 사업에 대해서는 자체 재원이나 민간자본 유치를 통해 충당하고, 경제성은 낮지만 지역 발전을 위해 시급성과 중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정부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정부가 신규 국책사업에 대해서는 우선 인구감소지역에 배정하고,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 대해 매칭 비율을 하향 조정하는 등의 선제적이며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실정이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최근 "지방소멸특별법이 제대로 그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 인구 감소, 소멸위기 지역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획기적인 지원책을 제시해줬어야 했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오병기 광주전남연구원 공공투자평가컨설팅센터장은 "결국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지역균형발전이 그 전제가 돼야 한다"며 "수도권이나 인구밀집지역은 자체 재원 또는 민간자본 중심으로, 비수도권은 국비 지원 중심으로 예산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맞춤형 재정분권을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담양 관방천의 진초록 여름 16일 오후 진초록으로 물든 담양 향교리 관방천의 돌다리를 관광객들이 건너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광주시장 인수위, 안전성 논란 지산IC 개통 원점 재검토

"왼쪽 진출, 시민 안전 담보 못해"

강기정 광주시장 당선인 인수위원회가 안전성 논란에 휩싸인 지산 나들목(IC) 개통 여부가 원점에서 검토된다.

16일 광주시와 강기정 당선인 인수위원회에 따르면 양측은 지난 15일 오후 광주 제2순환도로 지산 IC 현장을 둘러보고 안전성을 점검했다. 강 당선인은 광주시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현황을 보고받고 직접 시운전하기도 했다.

현장에서는 '1차로 진출' 방식이 운전자들에게 낯선데다가 주변 여건도 이를 극복할 만큼 좋지는 않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는 도로에 분리 봉을 설치해 1차로는 제한속도를 시속 60㎞ 정도로 낮춰 지산IC 진출 전용으로 활용하고, 2~3차로는 80~90㎞로 달릴 수 있게 하는 등 대책을 보완해 하반기 도로를 개통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인수위 내부에서는 시민 안전을 담보하기에 부족해 이 상태로는 개통이 어렵다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교통부령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연결로의 형식은 오른쪽 진·출입을 원칙으로 하도록 했지만, 지산 IC는 왼쪽인 1차로를 이용하도록 설계됐다. 서울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 국도 29호선 화순 람덕마을, 무안~광주 고속도로 무안공항 IC 등 소수의 도로만이 좌측 진출로를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지산 IC는 터널과 아주 가깝고 시야 확보도 어려워 이들 도로와는 사정이 달랐다고 인수위 관계자는 전했다.

만일 도로를 만들고도 개통하지 못하게 되면 광주시는 수십억 원의 매몰 비용을 발생시킨 행정 사례를 남기게 된다.

애초 오른쪽 진출 방식을 적용하려다가 주민 민원 등을 이유로 왼쪽으로 설계가 변경된 과정 등에 대한 조사도 예상된다.

지산 IC는 77억원을 투입해 양방향 총 길이 0.67㎞, 폭 6.5m로 개설돼 지난해 11월 개통할 예정이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68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2]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